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이 강 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요약 》

최근 성장률이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하며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추진하며 임금인상을 강조해 왔고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3월 춘투 1차 집계 결과 5.3%의 높은 임금인상이 실현되었고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한계가 크며 특히 실질임금의 정체와 민간소비 증가의 둔화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금인상과 그에 기초한 총수요의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정착이 역시 일본경제의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치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일본 경제가 30년이 넘는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회복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3년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를 기록하여 한국보다 높았고 올해 들어 닛케이 주가지수가 상승하여 3월에는 버블 시기의 최고를 넘은 4만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일본은행은 2016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금리와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을 폐기하고 기준금리를 0.1%까지 인상했다. 이제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을 배경으로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최근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임금인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최근 경제 회복의 한계

2013년 도입된 아베노믹스는 양적, 질적 완화로 대표되는 확장적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확장,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약간 회복되었지만 한계도 컸다. 여전히 2%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달성되지 않았고 실질임금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 2016년과 2021년의 2년만 상승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정체되었다. 팬데믹의 충격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했지만 경제위기 이후 회복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기시다 정부는 2021년 10월에 발표한 ‘긴급 제언’ 문서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 촉진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규정했고, 여러 성장전략과 임금인상을 포함한 분배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하청기업이 하청단가를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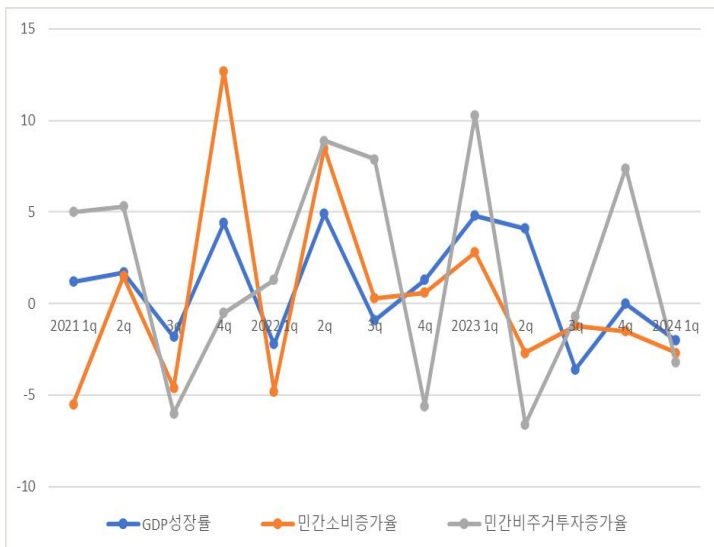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가 확립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 6월 발표된 실행계획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분배, 과학기술과 혁신, 스타트업,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대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공공투자를 강조했다. 이후에도 기시다 정부는 자산소득 배증 계획, 스타트업 육성계획 그리고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을 속속 발표해왔다. 2023년 일본 정부는 기존의 계획들을 더욱 발전시켜 업데이트한 ‘새로운 자본주의’ 계획을 다시 제시한다.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와 여러 선진국이 추진했던 포용적 성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는 또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을 강조한 2단계 아베노믹스, 1억 총활약계획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며 임금인상을 강조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기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성장전략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산업정책 그리고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 부활, 그리고 현대적 공급측 경제학의 문제의식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와 비교할 때 새로운 자본주의는 자민당 내부의 역할관계와 여론의 지지 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인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충격과 엔저를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장의 촉진에는 한계가 컸고 실질소득 감소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1>은 연율로 환산한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는 성장률이 꽤 높았지만 2분기부터 민간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

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으로 성장률이 1.9%를 기록했지만 이는 2022년 성장률이 1%로 낮았다는 기저효과와 관련이 있고, 2분기에는 순수출이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2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3분기와 4분기는 연율 환산 경제성장률이 -3.6%와 0%, 그리고 2024년 1분기 성장률은 -2%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에는 기업 도산 건수가 2022년에 비해 33%나 늘어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팬데믹 이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의 종료와 관련이 크다.

그림 1. 일본의 분기 경제성장률과 구성요소
(%, 전분기대비 연율환산)



자료: 내각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금상승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은 그보다 낮아서 실질임금은 2024년 3월까지 24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결국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가계소득이 정체되니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성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가는 올랐지만 2022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에서 개인투자자는 약 12%에 불과한

반면 2023년 저축이 제로인 인구는 전체의 27%나 되는 실정이다. 사실 일본의 임금상승 정체는 장기불황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었던 심각한 문제다. OECD 자료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1991년에 비해 겨우 5% 상승해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임금-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일본 경제 회복의 핵심은 임금인상이다. 기시다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려면 임금이 오르고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총수요가 확대되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총수요의 확대는 완전고용을 배경으로 생산성 상승도 촉진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는 임금이 1% 높아지면 산업생산이 0.2% 높아지고 16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를 포함하여 일본 사회 전체에서 임금인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확산되었다. 특히 2022년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가 급속하게 높아지자 이를 배경으로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3년 1월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리테일링이 임금을 40%나 인상하기로 발표하는 등 여러 대기업이 임금인상에 동참하여 2023년 춘투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다. 게이단렌도 임금상승이 기업의 책무라며 임금인상을 권고했고, 2024년에도 산토리홀딩스가 7% 인상을 발표하는 등 여러 기업이 임금인상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춘투에서는 1차 집계 결과 임금인상률이 5.3%로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의 임금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다.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드디어 2022년 2.5%, 2023년 3.2%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한 급속한 엔저와 관련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높아졌는데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더욱 높아져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안정적인 임금상승에 기초한 총수요 확대와 인플레이션이 정착된 후에야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 언급해왔다. 춘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월 19일 일본은행은 마침내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이 상호작용하며 물가-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긴축으로 돌아섰다.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통제를 해제했던 것이다. 물론 현재 인플레이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천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어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최근 엔화는 더욱 급락하기도 했다. 결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엔화 가치 회복을 위해서도 일본의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인상은 정권의 운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득 정체를 배경으로 기시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022년 상반기 50%대 중반에서 계속 하락하여 지난 2월에는 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높은 임금상승이 가능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임금상승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3년 노조의 춘투 결과는 명목임금 인상률이 3.6%였지만 경제 전체로는 1.2%에 그쳐서 실질임금상승률이 -2.5%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임금은 결국 노자간의 투쟁과 협상의

결과다. 그러나 일본의 노조는 기업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고 협상력이 취약하다. 노조조직률은 오랫동안 하락해 왔고,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극히 드물어서 2023년 파업을 동반한 노동쟁의는 겨우 65건에 그쳤다. 또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좌파 정치세력도 매우 약해서 임금상승을 추동하는 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고 변화가 느린 일본에서 재계를 포함한 대다수 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임금인상,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 총수요 확대와 인플레이션 정착 그리고 성장 촉진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일본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SIES**

| 약력 |

이강국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며 불평등과 경제성장, 세계화와 동아시아 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강국의 경제 EXIT' 등 여러 권의 책과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등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했고,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의 공동편집자이다.